

9. 業務現況

資料提供：建設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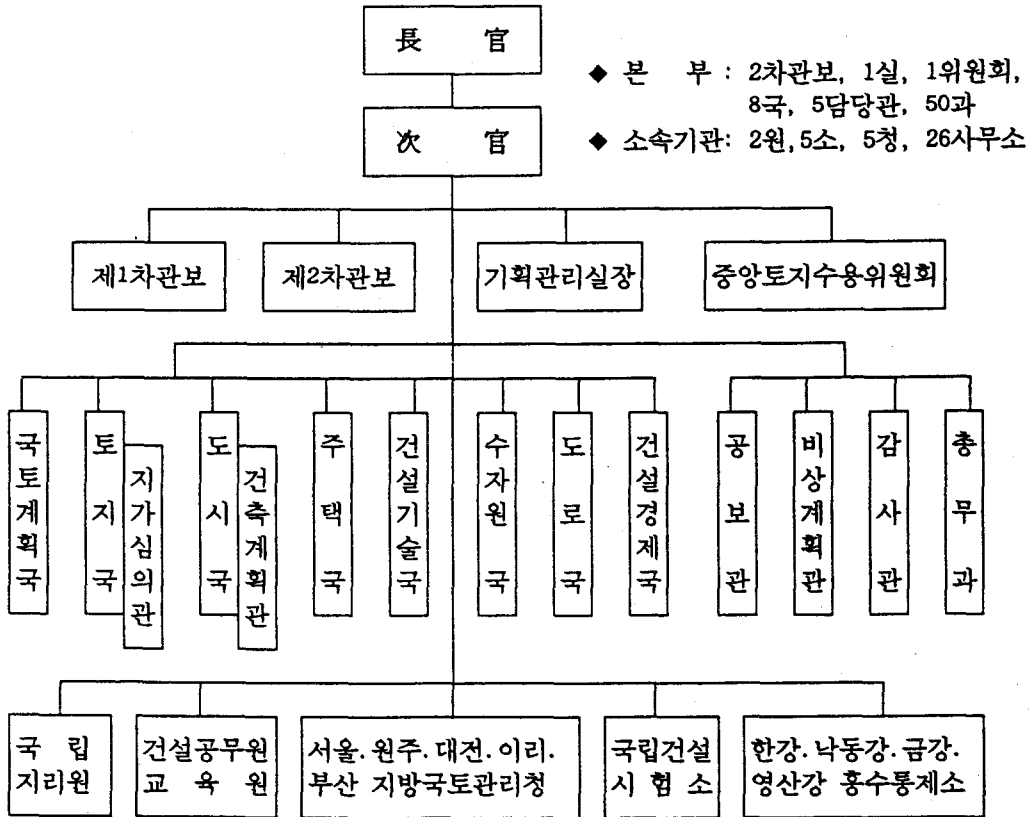
I. 일반현황

1. 임무 및 조직

- 건설행정은 국토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 도시·토지·주택 등 지역개발과 부동산 관련업무
 - 수자원·도로·공단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관리업무
 - 건설기술·부실방지·해외건설 등 건설산업 육성업무를 담당
- 본부 615명, 소속기관 2,276명 등 총 2,891명의 직원이 근무

2. 산하기관 및 단체

- 건설행정분야의 국가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4개 산하공사와 2개 연구원
 -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12개 협회와 3개 공제조합이 있음.
- 정부투자기관 : 4개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연구기관 : 2개
 -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 26개 사무소 :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6개 건설사무소, 중앙장비관리사무소

■ 협회(법정법인) : 12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측량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 공제조합 : 3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3. 소관법령

○ 건설부 소관법률은 총 53개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대통령령 63개와 건설부령 64개가 있음.

※ 소관법률 : 법무부(129개), 재무부(101개), 내무부(88개), 건설부(53개)

■ 국토계획분야 : 8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토지분야 : 9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도시, 건축분야 : 7개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공원법, 건축사법, 주차장법

■ 주택분야 : 5개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대한주택공사법

■ 건설기술분야 : 4개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 증기저당법, 건설기계관리법

■ 수자원, 상하수도분야 : 8개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 도로분야 : 7개

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도로정비촉진법,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한국도로공사법

■ 건설경제분야 : 5개

건설업법, 해외건설촉진법, 골재채취법, 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4. '94 예산현황

○건설부 소관 금년예산은 총 5조 65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0.3%증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 일반회계	9,661억원	19.1%
•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회계	1조 9,351억원	38.2%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1조 5,519억원	30.6%
• 토지관리 특별회계	3,621억원	7.1%
• 국고채	2,500억원	4.9%

-사업별로는 도로·수자원·주택등 3개분야가 전체의 92%를 차지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 도로	3조, 1099억원	61.4%
• 주택	8,145억원	16.1%
• 수자원	7,564억원	14.9%
• 공업단지	820억원	1.6%
• 지역사회개발	806억원	1.6%
• 토지관리	1,437억원	2.8%
• 건설행정등	781억원	1.5%

주요 분야별 예산개요

▣도로 : 3조 1099억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 국도포장	1,125	75km포장, 포장율 100%
• 국도확장	14,096	338km 4차선 확장
• 국도유지보수	2,516	노후교량개축·병목지점 개선
• 고속도로	9,045	도로공사 지원
• 기타 채무상환등	4,317	국고채 및 차관상환 등

▣수자원 : 7,564억원

사 업 명	예 산 액	총 사 업 비	사 업 기 간
• 다목적댐 건설	2,056	14,122	
남강댐 보강	868	4,505	87~96
부안댐	144	578	90~95
용담댐	551	5,600	90~98
횡성댐	154	798	90~96
밀양댐	120	984	90~97
영천댐 도수로	200	1,657	90~97
• 상수도 건설	3,597		
• 치수사업	1,911		

▣주택 : 8,145억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 영구임대	3,473	영구임대 90천호
• 공공임대	1,074	공공임대 22천호
• 주거환경개선사업	500	주거환경개선 17천호
• 국민주택기금 지원	3,000	근로자주택건설·구입자금

Ⅱ. 건설행정 기본방향

-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건설행정도 연초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시책을 추진중

〈중점 추진시책〉

- 『균형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공간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시책을 추진
- 도로·용수·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 땅값·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적극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부실공사를 추방하여 각종 시설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불안을 해소
-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건설행정 관련규제를 과감히 완화

Ⅲ. 분야별 추진시책

1. 국토 균형개발

국제화·개방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지방대도시권 육성·서해안개발, 그리고 낙후지역발전등 지역개발시책을 적극 추진

1-1 수도권 체계적 정비

-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제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을 개정(4.30)하여 3개 권역별로 체계적인 정비시책을 추진중
 - 서울중심 40km이내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
 - 수도권 외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택지와 공단개발을 통하여 서울에 밀집된 주거 및 공업기능을 흡수
 - 수도권 동부의 한강수계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하고 수질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외에는 가급적 억제

1-2 지방대도시권 육성

- 부산·대구·광주·대전등 지방대도시가 보다 세계화·국제화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
 - 부산: 환태평양 경제권을 겨냥한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 대구: 전자·섬유 및 패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광주: 업무기능과 첨단사업 기능을 강화
 - 대전: 중앙행정기능의 수용과 함께 과학연구·첨단산업을 확충
- 이를 위해 대도시와 주변 영향권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계획을 수립중
- ※ 33개 시·군 통합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도·농융합형 개발을 유도
 - 7월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시달

1-3 서해안 신산업지대 등 낙후지역 개발

- 21세기 환황해권시대에 대비하여 서해안지역에 『아산-군산·장항-대불-광양』을 잇는 신산업지대를 체계적으로 육성

- 아산만 : 경인지역에 밀집된 수도권 산업과 물류기능을 분담
- 군산·장항 : 중국과의 근접성을 활용,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육성
- 목포·대불 : 광주첨단기지와 연계, 서남권경제의 중심지로 개발
- 광양만 : 부산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의 전진기지로 육성

○ 강원태백·충북 및 경북북부 등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생활 기반시설과 주민소득기반을 확충

1-4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년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

■ 광역개발제도의 도입

- 대도시와 주변지역·공단과 그 배후지역·인접된 도시권등 개별 행정구역범위를 넘어서는 광역 경제권을 설정
- 도로·주택단지·공단·용수·쓰레기 처리장등 광역도시계획 시설의 입지 및 투자계획을 수립

■ 개발촉진지구의 설정

- 『낙후지역』·『전략적개발』이 필요한 지역·『도농총합형』 개발이 필요한 지역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개발
- 개발사업에 필요한 22개법률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

■ 복합단지 제도

- 주거·공업·대학·유통·관광등 여러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지의 개발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게 허용

■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2-1. 도로망의 확충

가. 현황과 문제점

- 도로는 전국 수송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국민경제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역할
 - 도로 총연장 58,847km
 - ↳ 고속도로 1,600km, 국도 12,078km
 - ↳ 지방도 10,688km, 특별·직할시도 13,082km, 시도 7,829km, 군도 13,568km
- 80년대부터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도로투자가 뒤따라 가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음.
 - 차량대수 : 161만대('87)→ 627만대('93) : 3.9배 증가
 - 도로능력 : 19,402km('87)→ 25,407km('93) : 1.3배 증가
 - 혼잡구간 : 262km('87)→ 2,780km('93) : 10.6배 증가
- 이에 따라 대도시는 물론 항만·공단등 전국 곳곳에서 체증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부담은 심각한 수준
 - 각국의 물류비용(제조업매출액 대비) : 한국 17%, 일본 11%, 미국 7%
 - 도로상 지체비용 : 연간 4조 8천억원(GNP의 2.3%)
- 2001년까지 자동차는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날 전망임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도로투자가 시급

	'93	'97	'2001
• 자동차 보유대수(만대)	627	1,027	1,380
• 인구당 보유대수(대/천명)	142	225	293

나. 국가 간선도로망체계의 구축

- 교통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수도권과 경부축의 과밀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
 - 서울·부산등 대도시권에 순환고속도로를 건설, 지하철과 연계하여 도심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사순환형 도로망 건설
 - 전국은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형성

구 분	총연장	기개설	기착수
계	6,160km	1,602km	590km
· 남북 7개축	3,291km	694km	454km
· 동서 9개축	2,869km	908km	136km

- 남북 7개축중 4개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연결축으로 활용
 - 목포-서울-신의주
 - 마산-원주-혜산
 - 광주-서울-만포
 - 부산-강릉-청진
- 2020년까지 장기도로망체계가 확립되면 우리나라의 간선도로망은 현재보다 4배로 증가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이러한 장기목표하에 『신경제』 계획기간중에는 총 22조원을 투입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3,000km 건설계획을 추진중
 - 고속도로 : 350km 신설, 350km 확장
 - 국 도 : 300km 신설, 2,000km 확장

주요 고속도로 건설실적 및 계획

구 분	연장 (km)	시행기간	총사업비 (억원)	'93까지	'94	'95이후
계(16개 노선)	1,474.5		205,334	31,705	17,341	156,288
—신설(10개)	1,083.7		162,988	21,044	12,245	129,699
1. 서해안(인천—목포)	353.0	'90—2004	44,775	6,946	2,270	35,559
(인천—안산)	(27.6)	('90—'94)	(4,473)	(4,213)	(260)	(—)
2. 중앙(대구—춘천)	280.0	'89—2004	33,192	5,706	2,400	25,086
3. 서울외곽순환	92.0	'90—2003	35,176	3,559	2,818	28,799
4. 제2경인(서울—인천)	15.5	'90—'95	2,700	1,608	500	592
5. 시흥—안산	12.5	'91—'95	2,392	563	730	1,099
6. 신공항고속도로	40.9	'89—'97	8,840	226	1,141	7,473
7. 대전—진주	161.0	'92—2003	14,029	297	600	13,132
8. 대전남부순환	20.8	'94—'97	2,496	—	100	2,396
9. 부산—대구	100.4	'90—2003	18,891	1,833	1,495	15,563
10. 하동—광양	7.6	'90—'94	497	306	191	—
—확장(6개)	499.0		42,346	10,661	5,096	26,589
11. 경인(서인천—인천)	10.5	'94—'98	955	4	100	851
12. 경부(반포—양재)	5.2	'91—'94	625	244	360	21
(청원—회덕)	14.4	'93—'96	928	12	180	736
13. 영동(신갈—원주)	77.0	'90—'94	4,464	2,438	2,026	—
(원주—강릉)	125.8	'93—2001	19,837	12	180	19,645
14. 호남(고서—순천)	71.4	'92—'97	4,310	538	730	3,042
15. 구마(옥포—내서)	64.3	'91—'95	3,240	643	1,040	1,557
16. 남해(냉정—구포)	22.2	'91—'95	1,812	595	480	737

다. 도로운영체계의 개선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소통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로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도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
 - 최근 심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관내 국도에 대하여는 우회도로를 새로이 건설하여 도시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국도·지방도 상호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간 연결기능이 큰 지방도 등 3~4천km를 국도로 승격 추진
 - 금년 8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징수 기계화, 연휴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등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
 - 주요 국도의 간선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진출입로·교차로·횡단보도 등을 정비하고 교차로입체화·버스정차대설치 등 병목구간 개선사업에 적극 투자
- 21세기 도로교통체계에 필수적인 『종합도로정보망』 구축을 위해 단계적인 개발사업에 착수
 - 금년말부터 대전이북의 경부·중부 고속도로에 『자동 교통관리 시스템』을 가동
 - 첨단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도로교통체계』도 금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발에 착수

라. 재원확충 및 민자유치

-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 신경제 계획기간중 약 3조원의 재원부족 예상

투자소요(93~97)	국고확보	통행료수입	부족액
21조 6,788억원	15조 328억원	3조 6,134억원	3조 326억원

-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부문의 민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
 - 지방도시의 우회도로와 터널·교량 등 수익성 있는 구간에는 요금자율화를 통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

- 고속도로 등 대규모사업에도 민자유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조성 등 부대 사업을 적극 허용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

○ 사회간접자본이 후대까지 편익이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검토

- 우선 공공기금 등의 여유자금에 의한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점차 일반공모에 의한 채권발행을 확대

2-2 용수의 원활한 공급

○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하여 홍수시에는 수해가 빈발하고,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라는 등 연중 고른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지난 60년대부터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으나, 아직도 전체 수자원(1,267억톤)의 23%만 활용

- 수자원 총량면에서는 현재 20억톤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6억톤으로 줄어들 전망

구 분	70년	80년	93년	2001년	2010년
• 수요량(억톤)	139	225	290	330	370
• 확보량(억톤)	150	243	310	349	376
• 예비량(억톤)	11(8%)	18(8%)	20(7%)	19(6%)	6(2%)

○ 수자원은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데다가 다목적댐 건설에 통상 7~8년이 소요되므로 10년 앞을 내다 보는 선행투자가 불가피

○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 『다목적댐』과 중소규모 『상수원전용댐』을 지속적으로 건설

- 현재 추진 중인 남강·부안 등 7개댐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

구 분	저 수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남강댐	3.1억톤	4,505억원	87~96
용담댐	8.2억톤	5,600억원	90~98
부안댐	0.4억톤	579억원	90~95
횡성댐	0.9억톤	798억원	90~96
밀양댐	0.7억톤	984억원	90~97
영천댐도수로	1.0억톤	1,657억원	90~97
보령댐	1.0억톤	1,754억원	90~97

- 탐진(1.0억톤)·적성(1.6억톤)·영월댐(7.7억톤)은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2001년까지 완공

○ 확보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21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공급량 : 486만톤/일→1,299만톤/일)

• 건설중(10개) : 금호강계통(37만톤), 주암댐계통(40), 수도권Ⅳ(153)

낙동강Ⅱ(20), 전주권계통(70), 부안댐계통(8), 주암댐Ⅱ(24)

충주댐계통(25), 수도권Ⅴ(220), 보령댐계통(29)

• 계획중(11) : 동화댐계통(5만톤), 대청Ⅱ(40) 등 총 188만톤

- UR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도 앞으로 10년동안 『농어촌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

○ 신산업지대 형성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1년까지 10개 『공업용수도』를 적기에 건설

• 건설중(6개) : 군산(13만톤/일), 울산(77), 대불(12), 광양Ⅱ(5)

아산Ⅰ(35), 녹산(12)

• 계획중(4개) : 군장(52만톤/일), 아산Ⅱ(40), 광양Ⅲ(30), 광주첨단(7)

○ 대체용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 지하수보전구역지정,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수질검사 강화 등 철저한 수질관리 방안을 강구

○ 물 자원의 낭비를 자제하도록 계몽하는 한편,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물 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톤당물값 : 한국 219원, 미국(워싱턴) 2,310원, 일본(동경) 962원

2-3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

○ 공장용지의 부족현상과 높은 가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커다란 요인

○ 92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3,500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장기계획에 따라

- 현재 추진중인 12개 공단에서, 342만평을 공급하고

- 금년중 새로이 6개 공단(467만평)의 개발에 착수

- | | | |
|---------------|---------------|----------------|
| • 부산 신호(94만평) | • 전남 나주(90만평) | • 경북 안동(45만평) |
| • 충남 홍주(82만평) | • 충남 월산(56만평) | • 경남 함안(100만평) |

○ 공장용지 분양을 촉진하고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용지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중(평균 15%인하)

- 공단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점용료를 전액 면제

- 농지·산지 전용부담금의 감면폭을 확대(50%→70%)

- 항만부지·폐기물 처리장등 무상공급시설을 축소

- 사업시행자의 이윤과 공단관리비도 면제 또는 대폭 축소

※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7월말까지, 법률(항만관련)은 연말까지 개정조치

○ 지난해 새로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장용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

3.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공급 확대

가. 현황 및 추진실적

- 연초부터 경기회복이 예상되면서 물가불안과 함께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부동산투기는 경제안정화 시책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인식하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투기방지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
 -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향감시반을 구성하여 거래상황을 집중조사
 - 금년 1월부터 모든 토지거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거래자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주택 및 토지거래전산망이 완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적극 홍보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집값·땅값의 안정세가 정착
 - 집값은 2월 이사철에 소폭 올랐으나, 3월 중순부터 안정세를 회복

구 분	9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월)
• 매매	0.0%	0.1	0.0	△0.1	△0.1	△0.1	△0.2
• 전세	0.1%	0.6	1.1	0.4	0.2	0.2	2.6

※ 다만, 신도시의 경우는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땅값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1/4분기
• 변동율	12.8%	△1.3	△7.4	△0.41

나. 토지가격 안정대책 추진

-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거래에 대해 종합전산망체계를 구축
 - 금년 1월부터 전산처리 하고 있는 토지거래동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대처
 - 금년말까지 주민등록·지적·공시지가자료를 상호연결한 종합토지 전산망을 구축하여 토지소유 및 변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건설부·지방자치단체·토개공 및 국세청과 협조하여
 - 시·군 통합지역, 수도권 준농림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투기가 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 점검

-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중, 준농림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토지거래
 - 허가구역 : 36,647km²(전 국토의 36.9%)
 - 신고구역 : 37,847km²(전 국토의 38.1%)
 - '94지정
 - 허가구역 : 3,215km²(재지정 2,095km², 신규 1,120km²)
 - 신고구역 : 654km²(재지정 647km², 조정 7km²)

- 이러한 투기억제시책과 병행하여 공급부족으로 땅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토지의 공급도 확대

다. 주택공급의 확대

- 『신경제』기간중 총 28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율을 90%로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에는 55만호 건설을 추진중

구 분	92	93	94	95	98
• 주택보급율(%)	76.0	79.1	80.9	83.3	90.0

- 공용부문에서는 3조 9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도시영세민과 근로계층을 위한 소형주택 20만호를 건설
- 민간부문에서는 시장기능에 따라 35만호의 주택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주택자금 4조 600억원을 지원하고 주택사업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 항상 취약성이 잠재해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확보에 최대한 노력중
 - 신경제 기간중 수도권에 필요한 택지(3,900만평)의 60%수준인 2,580만평을 공공부문에서 개발·공급

- 지금까지 1,870만평(72.5%)을 확보, 나머지 710만평도 금년말까지 확보 완료
- 도시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토지활용도를 제고
-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보는 건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촉진

4. 부실공사 방지

가.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부실공사는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임.
 - 해외에서 국제수준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지탄의 대상
- '92년 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입찰·시공·감리등 건설관련제도를 대폭 개선

■ 입찰제도 개선

- 100억이상의 교량·터널등 14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시공실적과 기술능력을 증시하는 입찰가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93.7월)
-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당경쟁과 덤핑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 70%미만 낙찰공사는 85%까지 낙찰차액을 현금으로 예치(93.9월)
 - 85%미만 낙찰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체상금을 2배로 강화하고, 감리자를 증원배치하는 등 공사감리를 대폭 강화(93.2월)

■ 감리제도 개선

- 종전의 공무원 감독체계를 『민간책임감리』로 전환(94.1월)

- 감리대상 : 50억원이상 공공공사(연간 총 1,100건)
- 감리회사 육성을 위하여 4개 투자기관에 감리자회사 설립(94. 1월)
- 감리대가 현실화(2~3배) · 권한부여(공사중지 · 재시공등) · 책임강화
- 감리자에 대한 직무 및 의식교육 지속실시(지금까지 7회 6,900명 실시)

▣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책임강화

- 주요 구조부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 3~5년 → 최대 10년
-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 영업정지 → 면허취소
 - 대표자 · 기술자는 5년이하 징역
 - 금년들어 111개 업체 제재(면허취소 9개사, 영업정지 15, 과징금 77등)
-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마감부실등 경미한 부실에 대해서도 『누적점수화』하여 P.Q 시 감점 등 입찰참가를 제한

▣ 하도급 질서 확립

- 『부대입찰제』, 『하도급 직불제』 등의 시행을 통하여 하도급 계열화를 유도(93.6월, 9월)
- 일괄하도급에 대한 제재강화 : 영업정지 → 면허취소(94. 7월)

나. 현장중심의 부실방지대책 추진

- 부실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특히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금년에는 부실공사를 반드시 척결한다는 굳은 각오로 철저한 대책을 추진중
 - 연초부터 전국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
 - 총 1,109건의 부실사례를 적발, 정도가 심한 47건은 재시공
 - 감리책임이 있는 31개업체에 대하여도 영업정지등 강력 조치

- 부실공사는 공무원과 업계의 불건전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 전국의 건설공무원과 업체 종사자에 대해 결의대회·세미나·표어부착·구호합창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과 관행개혁운동을 전개

-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건설행정체 질화 되도록 건설부 직제도 개편
 - 본부에 『건설기술국』을 보강하여 부실방지·안전관리기능을 강화
 - 5개 지방청에 『건설관리실』과 『부실신고 센터』를 설치

- 부실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최근 건설업계도 스스로 각성하고, 경영혁신·기술개발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이같은 분위기가 『성실시공』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기능경기대회(6.8)와 건설진흥추진대회(6.22)를 개최

- 앞으로도 건설업계에 책임과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히 정립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5. 건설시장 개방대책

가. 시장개방과 국제경쟁력 강화

- UR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민간 건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되었으며, 97년부터 공공건설시장도 개방
 - 민간건설
 - 일반건설업 : 94년부터 100% 단독투자, 96년부터 지사설치허용
 - 전문건설업 - 96년부터 100% 단독투자, 98년부터 지사설치허용
 - 공공건설
 - 중앙정부 발주공사 : 500만 SDR이상(약 53억원)
 - 시·도 발주공사 : 1,500만 SDR이상(약 160억원)
 - 23개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 1,500만 SDR이상(약 160억원)

- 이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시장을 어느정도 잠식하겠지만, 선진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의 전수가 활발해질 전망
 - 해외건설시장은 지금까지 문호개방에 소극적이던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시장에 대한 진출가능성이 크게 확대

- 이에 대비하여 건설업이 기술을 바탕으로한 상호경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
 - 입찰제도·감리제도·하도급제도 등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건설산업체제개편을 위하여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중
 - 특수건설업중 포장공사업을 폐지하여 전문건설업에 편입
 - 전문건설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9개 업종을 23종으로 확대
 - 기술자 보유요건등 건설업 면허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

- 건설업경쟁력의 관건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연·관 합동으로 기술개발체계를 구축

나. 해외건설 진출확대

- UR타결로 각국의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건설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
 - 지난해부터 해외진출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 정부의 도급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 해외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제도도 대폭 감축하거나 폐지
 - 최근 해외건설공사가 금융지원과 연계되어 발주되는 추세에 맞추어,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 연불금융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94.5)
 - 현지금융 허용조건도 대폭 완화(94.6)
 - 해외 부동산개발을 위한 투자제한 요건도 완화(94.3)

- 세계시장 개방을 계기로 우리의 해외건설이 종래 주력시장인 중동과 동남아 이외의 지역으로도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다변화를 추진
 - 중국·러시아·베트남 : 자원협력 및 공장·공단건설에 주력
 - 미국·유럽·일본 : 부동산개발과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주력

- 해외건설 진출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건설외교도 아울러 전개
 - 지난 3월 일본에 이어 4월에는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폴등 동남아에서 건설장관 회담 개최를 통해 국가간 우호증진
 - 중국·러시아·베트남등 유망지역에 해외건설관 파견을 추진하는 등 시장조사와 함께, 강력한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